

“임종석 UAE 왜 갔나” 국회 운영위 시끌

민주당 “불법 소집” 불법
장제원 “청와대 오더나”
김동철 “임종석 출석해야”
막말·고성·삿대질 난무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하고는 전원 운영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수석이 약 30분 가까이 항의를 이어갔고 한국당 의원들이 역으로 발끈하면서 막말과 고성, 삿대질이 이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위원장석을 가로막고 “안건도 없이 회의를 (한국당이) 잡아놓고 무슨 상임위를 개최하느냐. 불법적으로 소집된 회의”라고 항의를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라 하고 지시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에서 ‘오더’받았느냐. 임종석 실장의 보좌관이냐. 입법기관으로서 체통을 지키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어 박 부대표가 퇴장한 후,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운영위는 진행됐으며, 임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을 문제 삼는 발언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꽂무니를 캐다가 UAE 왕실자까지 들여다보고, 그것이 발각되자 왕실에서 격노해 대한민국과



‘반쪽’ 운영위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특사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안전 협의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교단절을 하겠다고 항의했고, 이를 무마하고자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원 1차장을 대동하고 사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중 ‘홀대’와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나라 망신을 똑똑히 시킨 경호와 외교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주중대사 등 외교안보라인과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UAE에 비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잠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며 “비록 운영위에 당사

자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운영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국정원 1차장, 국방차관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비서관들까지 전부 출석시키는 가운데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권 여당이 ‘일방적인 지라시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하는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많이 봤다”며 여권의 보다 솔직한 태도를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예방한 것은

큰 틀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임 실장의 방문이 UAE 측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UAE에서 진행되는 원전 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과 모하메드 왕세제 간 회담에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이 배석한 것과 관련 “국정원 1차장은 해외업무 파트 담당자이고 해외 순방 때 동행할 수 있다”며 “국정원 내부의 행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UAE 현지 언론의 보도로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여야 개헌특위 연장 공방

與 “논의 거부시 靑 발의 검토”...한국당 “정략적 술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19일 그동안 미뤄 놓았던 개헌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의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개헌시기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실시를 거부할 경우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사실상 대통령의 의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제야당인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여권이 지방선거 바람몰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정략적 술책을 쓰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 논의 동장을 당론으로 거부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개헌을 결연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방안이란 사실상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읽힌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첨예화적인 국면 현재가 지출될 뿐 아니라 예상가능한 시간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따르는 것”이라며 “특위만 연장하지는 않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개헌을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개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개헌특위 활동 종료 압박을 규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대선에서 공약한 동시 투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여당도 한국당을 핑계로 청와대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이었는데, 개헌 논의 동장을 당론으로 거부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개헌을 결연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방안이란 사실상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읽힌다. /김형호기자 khh@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약자 위한 재판 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6시 40분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 및 법원행정 업무

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고 사법부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야 ‘신생아 집단 사망’ 원인 규명 한목소리

복지위 이대 목동병원 사건 추궁...대책 마련 촉구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 보건 당국의 대응시스템 미비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병원 감염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동일 의료행위가 있었는지가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일”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비참한 사태를 빚어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인큐베이터 옆에 바퀴벌레, 소독되지 않은 젓꼭지를 물리고 외부인이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간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런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대목동병원의 환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 있는 보건복지부의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당시 경찰과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의 조동대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사망 신

생아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보건소를 연결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면서 사고가 알려지게 됐다”며 “의료기관 내 사망사건에 대한 매뉴얼을 보니 복지부 차원의 매뉴얼도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을 관할하는 양천경찰서가 보건소에 사고를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에도 신고했다”며 “그런데 고발만 답변이 ‘그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1399가 그렇게 대응하는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대목동병원이 사고 발생 직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

다. 현행 규정은 병원에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보고 의무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고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근 의원 역시 “이번 사건으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법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승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주 동감한다”면서 “원인 미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그 역시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지방자치 아카데미 ‘복적’

표창원·안민석 등 특강...100명 모집 300여명 몰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300여명이 몰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도당 회의실에서 제2기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내년 2월13일까지 총 57일간의 일정으로 14강좌가 열린다. 강사로는 이춘석 사무총장, 정청래 전 최고위원, 표창원·안민석 의원,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 등이 나선다.

이어 이춘석 사무총장의 ‘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방향과 지방선거’, 정청래 전 최고위원의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선거’를 주제로 한 강연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차세대 정치리더 육성”을 표방한 민주당 전남도당 제2기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내년 2월13일까지 총 57일간의 일정으로 14강좌가 열린다. 강사로는 이춘석 사무총장, 정청래 전 최고위원, 표창원·안민석 의원,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 등이 나선다. 수강생은 100명 모집정원에 3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2018년 IP-R&D 전략지원 사업(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2018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중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상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 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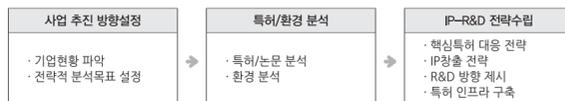
2.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맞춤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3. 세부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중소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맞춤형·맞춤형으로 지원

• 전략수립 지원 절차



- (신청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재창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rf.ms.go.kr)에서 확인 가능
재창업 중소기업	- 재창업기업 - 7년 이내에 재창업한 기업(2012년 1월 1일 이후 재창업)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공고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기업 - 상기 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 지원 유형 및 규모

과제 유형	기간	지원규모	지원 내용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R&D수행 IP전략형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5월)	00개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R&D수행 IP전략형	12주(3월)	00개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 창출 전략 제시	
제품화 IP전략형	12주(3월)	0개	보유한 핵심기술(특허) 보완 및 추가 특허, 주변기술 특허,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상용화 지원	
재창업·사회적기업형	0개	0개	핵심특허대용,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재창업 기업의 성공적 재기 및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디자인 중심 제품 개발	20주(5월)	0개	제품 또는 서비스 컨셉에 대한 시장 및 경쟁사 디자인·특허의 병행 분석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R&D 전략 및 디자인·특허 창출 전략 수립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12주(3월)	0개	보유한 핵심기술(특허)에 관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특허 확보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 조건

과제 유형	수행기간	기업부담금 (단위: 백만원)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5월)	14	6	20	10
R&D수행 IP전략형	12주(3월)	8	4	11	7
제품화 IP전략형	12주(3월)	8	4	11	7
재창업·사회적기업형	0개	4	2		
디자인 중심 제품 개발	20주(5월)	17	7	23	13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12주(3월)	10	4	14	8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 12. 19(화)부터 2018. 1. 19(금) 14시까지
-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ppro/)를 통한 온라인 신청

5. 사업 추진 절차



6. 사업설명회 개최

개최 일시	지역	개최 장소
2017. 12. 21(목)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2018. 1. 4(목)	광주(북구)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제2회의실
2018. 1. 5(금)	대구(달서구)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 신학협력관 3층 강의실
2018. 1. 5(금)	제주(세종)	제주경제진흥원 2층 대회의실
2018. 1. 9(화)	강원(원주)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5층 회의실
2018. 1. 10(수)	대전(유성구)	대덕테크노센터(TBC) 1층 콜라보홀
2018. 1. 11(목)	충북(청주)	충북청정경제혁신센터 1층 세미나실
2018. 1. 11(목)	서울(구로구)	키움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
2018. 1. 12(금)	부산(해운대구)	백스코 제1전시장 216호실

* 참가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 신청 관련 문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319, 4362, 4399

* 자세한 사항은 2018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ppro/)→사업공고)